

이슈파워

“유치원 무단 폐원, 원생·학부모에 배상”...법원, 설립자 배상 인정

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판사 송주희)이

경기 하남 모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 중 이던 원생 5명에 대해 1인당 30만원, 이들의 부모에게는 20만원씩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을 무단 폐원함으로써 재원 중이던 원고 유치원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정신적인 고

일부러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을 위반해 폐쇄인거나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포함하는 벌칙을 두고 있는데도 학부모 동의받지 않고 유아 지원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폐쇄인가를 신청하고 반려했음에도 유치원 폐쇄를 강행했다”며 “재학 중인 원고 유치원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급히 전원시키는 등 재산·비재산상 피해를 봤음이 자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유치원에서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부실급식 및 보조금 부당 수령 등에 관한 고용 원장의 내부 고발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반발, 폐원을 통보했던 시점이기도 하다.

‘文대통령 생일축하’ 광고 돌연 철거 ‘논란’

광주도시철도공사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내부 규정”

광고 낸 시민모임 “선관위에 문의해 문제 없음 확인”

광주 지하철역에 실린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4일 만에 철거됐다.

15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 지하철 1호선 문화전당역에 문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가로 4m, 세로 2.25m 크기 와이드 광고가 실렸다.

광고에는 문 대통령 사진과 함께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1953년,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68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는 축하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 광고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게재될 예정이었으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14일 오후 5시쯤 광고를 철거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광고 업무

를 맡는 대행사가 광고를 게시했는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낼 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며 “광고주(대한사람대한으로길이니보전회)는 정치적 목적이 없는 광고라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부득이하게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광고를 낸 ‘대한사람대한으로길이니보전회’는 “선관위위원회에 문의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단체 트위터에 “정치적 의도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는 생일축하 광고”라며 “폐쇄된 사유는 공식 선거법과 관계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문화전당역에 설치된 축하광고 모습.

단체는 자신들을 ‘문 대통령의 68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1회성으로 뜻을 모은 평범한 여성들의 모임’이라고 트위터에

소개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합정역 인근 전광판에도 동영상 광고를 내고 있다.

위기의 한유총

‘3000독’ 단독방 3분의1 토막

사립유치원 이익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원장들의 대화방 참여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한유총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과거 3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3000독’으로 불렸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인원이 1100명 선으로 줄어든 것이다. 굵지 않은 여론과 다른 유치원 단체로의 이동 등으로 세력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유총 회원들의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현재 117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유치원 관계자는 “갈수록 참여인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유총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유총의 대략적인 진성 회원수는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인원만 가능할 수 있다. 과거에는 참여인원이 3000명이 넘어 ‘3000독’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그 3분의 1 가량인 1170여명의 인원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사립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에듀파인 의무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소송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들이 주축이 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원장들이 ‘대안’을 찾은 것과도 관계가 있다. 한유총 소속 소수 온건파 원장들이 나와 따로 만든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의 회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고생 1.2%가 학교폭력 피해...가해 이유 “장난·이유없이”

교육부, 초4~고2 13만여명 조사 초 2% 켜어...언어폭력·따돌림↑

초·중·고교생의 1.2%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초·중학생은 2.1%가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다.

교육부는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1~30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3만여명을 표본조사한 결과다.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생이 2.1%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0.8%, 고교생 0.3% 순이었다.

교육부는 학기마다 1회씩 해마다 2차례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2018년부터 ‘1학기(1차) 전수조사, 2학기(2차) 표본조사’로 조사 방식을 바꿨다. 첫째 2.5%였던 표본조사 대상을 지난해에는 4%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2학기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시행되면서 자체 해결된 사안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아 피해 응답률이 낮아졌을 가능

성도 있어 내년에는 구분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과 집단따돌림(19.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스토킹(10.6%) 사이버괴롭힘(8.2%) 신체폭행(7.7%) 강제심부름(4.8%) 성추행·성폭행(5.7%) 금품갈취(4.5%) 순이었다.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에 이어 초·중학교는 스토킹과 사이버괴롭힘이, 고등학교는 성폭력과 스토킹이 많았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차 실태조사와 같은 0.6%로, 피해 응답률의 절반 수준이었다. 가해의 주된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3.2%)라고 답했다.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6.5%) ‘오해와 갈등으로’(13.4%)가 뒤를 이었다. 1차 실태조사 때는 ‘먼저 괴롭혀서’(29.7%) ‘장난으로’(17.7%) 순이었는데 순위가 역전됐다.

학교폭력 발생 원인과 관련한 인식 조사에서도 ‘단순 장난’(29.4%)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19.2%)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학생이 많았다. 이어 ‘피해학생이 힘이 세서’(11.6%) 순이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 있다는 학생은 3.4%였다. 68.8%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고 피해학생을 돕거나 주위에 신고 했다고 응답했다.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9.5%였다.

-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 061)333-6832 FAX : 061)334-7701

자 회사
신원자원